



##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불편한 인증 폐지 등 연간 약 1,527 억원 기업 부담 경감

- 총 257개 인증(25개 부·처·청)에 대한 '인증규제 개선방안' 발표 -

□ 전체 257개 법정 인증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정비하여 189개 개선 방안 마련

구 분	정비 기준 및 주요 사례
<b>폐 지</b> (24개)	· 국제인증과 중복되거나 환경변화 미흡으로 실효성을 상실한 경우 (사례) 천연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 - 국제인증(COSMOS 인증)과 중복 한국관광 품질 인증 - 소비자 트렌드를 적기에 반영 곤란
<b>통 합</b> (8개)	· 대상, 평가항목 및 절차 등이 유사하거나 중복인 경우 (사례)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통합
<b>개 선</b> (66개)	· 인증 비용 또는 절차가 기업 입장에서 과도한 경우 (사례)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대상 완화(매출 100→300억원 이상 기업) 심사항목기간(6개월) 축소

\* 제외(91개) : 명칭만 인증인 경우, 소비자 혼선 유발 등 인증요건에 부적합한 제도의 인증목록 삭제 및 표지(마크) 사용제한→ 지정제도 등으로 전환

□ 한덕수 국무총리는 2.27(화) 오전 개최된 제35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논의하고 소관 부처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하였다.

○ 이번 정비방안은 여러차례 추진했던 인증규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체감효과가 낮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으며, 그간의 규제개선과 달리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인증을 통·폐합하고 나아가 향후 무분별한 인증제도 신설을 방지하는 체계까지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 추진단은 중소기업 읍부즈만, 중소기업중앙회, 인증기관, 관련 협회·단체 및 산·학·연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인증소관 부처(25개)와 협의를 거쳐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 [1] 인증제도 정비

□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법정인증(257개)을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해외 주요국의 법정인증은 **안전·의료·보건 등으로 한정하여 운영 중**

→ (美) 93개, (EU) 40개, (中) 18개, (日) 14개

□ 기업은 인증을 취득·유지 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왔으며, 소관 행정기관도 국민의 생명·안전 등을 위한 수단으로써 인증을 활용하기보다 진흥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 **전체 257개 법정 인증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정비**


○ 국제인증과 중복되거나 환경변화 반영에 미흡한 등 실효성이 낮은 24개 인증을 **폐지**하고, 유사·중복 인증을 8개로 **통합**하였고,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 등 총 66개 인증을 **개선**하였다.

○ **또한** 인증 요건에 부적합한 제도는 **제외**(91개)하여 「e나라 표준인증」 목록에서 삭제하고 인증마크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 ① 실효성이 낮은 인증 폐지(24개)

○ 기술·사회 발전에 따라 실효성이 없거나 기업의 수요가 없는 인증은 폐지

< 현장의 목소리, 화장품 제조기업 A사 >

 " ~ 어차피 수출하려면 국제 인증인 '코스모스(COSMOS)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국내 판매를 위해 **국내 인증을 또 받으라구요? ~**"

✓(사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 (식약처)

▶(현황) 국제적으로 "코스모스(COSMOS) 인증"이 통용되고 있어, 국내 인증은 기업에 이중 부담으로 작용함

▶(개선) 국내 인증제도 폐지



### ② 유사·중복 인증 통합(8개)

○ 인증 대상, 시험 항목 및 절차 등이 유사한 인증제도를 통합하여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 경감

< 현장의 목소리, 건설기업 B사 >



"~ 건물 에너지 관련 인증이, 대상 등이 같은데 왜 따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사례)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국토부)

- ▶(현황) 2개의 건물에너지 관련 인증이 대상·평가 방법 등 유사
- ▶(개선)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으로 통합



### ③ 인증 비용, 절차 간소화 등 개선(66개)

○ 제도 운영 성과 등을 바탕으로한 기존 절차 개선 및 유효기간 연장 등 개선

< 현장의 목소리, 수도계량기 제조기업 D사 >



" ~ 현재 모든 제품은 전수 검정을 받아요 자동화 생산라인이라서 딱히 품질문제도 없는데... 결국 검정에 드는 비용은 제품 원가에 반영되어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더라구요 ~ "

✔(사례) 계량기 형식승인 및 검정 (산업부)

- ▶(현황) 계량기 6종(저울, 수도·가스, 적산전력계 등)에 대해 국제법정 계량기구의 관리체계를 사용하나, 해외에 비해 과도한 검정을 운영(전수검사 약 650만건/년)
- ▶(개선) 계량기별 특성을 고려→ 샘플링 검정 방식 도입



< 현장의 목소리, 인터넷 쇼핑몰 운영 중소기업 C사 >



" ~ 1년 수익의 절반이 인증 유지하는데 들어 간다구요!!! ~ "

✔(사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과기정통부)

- ▶(현황) 기업 또는 조직의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인증제도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 기업은 과도한 인증비용 부담을 제기
- ▶(개선) 대상 기업 기준을 완화(100억원→300억원이상)하고 심사 항목 · 심사기간(6개월)을 축소→ 간이심사제도 도입



### ④ 소비자 혼선 유발 유사인증 제외(91개)

○ 국가·국제표준 등 기술기준 미비 및 사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인증에서 제외하고 소관 부처의 타 행정행위로 전환

✓ (사례)수산식품 명인 (해수부)

- ▶ (현황) 수산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 등의 우수한 자를 수산식품 명인으로 인증하는 제도
- ▶ (개선) 인증제도에서 제외하며 지정제도로 전환



✓(사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고용부)

- ▶ (현황)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직접 고용하는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하는 제도
- ▶ (개선) 서류심사를 통한 지정제도로 전환



## [2] 인증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 제품 출시에 적기 대응하고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미·일·EU에서 운용중인 자기적합성선언(사후관리방식)을 도입하고, 민간 인증기관 허용, 상호인정협정(MRA)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⑤ 자기적합선언(DoC) 신규 도입 및 확대

- 기업이 스스로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선언하고, 제품 등의 안전성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후관리 방식으로 인증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 \* 자기적합성 선언(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제조자가 스스로 또는 시험·검사기관의 확인을 받아 적합을 선언하는 제도
- 신규로 KS인증, 방송통신기기 인증(KC인증), 친환경선박 인증에 도입되며, 전기용품·생활용품 인증(KC인증)은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 현장의 목소리, 생활용품 제조기업 F사 >




"~ 시즌마다 신제품을 출시하는데, **매번 인증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

✓ (KC인증) 전기용품·생활용품(산업부)

✉ 일부 품목에 대해 DoC를 운영 중이나, 제품 위해도 등을 고려하여 자기적합성선언(DoC)품목 추가 확대

< 현장의 목소리, 조선업 E사 >

 “~ 해외 발주 선박도 **친환경 선박 건조실적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

### ✓ 친환경 선박 인증 (해수부)

☞ 「친환경선박 인증」(해양수산부)의 인증 신청자가 선주(船主)로만 한정되었었는데, 이를 “선주+조선사”로 확대하며, 해외 발주 선박에 대해서는 국내 조선사가 DoC 할 수 있도록 개선. 이로 인해 해외 발주 친환경 선박도 공식적으로 인정 가능

## ⑥ 민간 인증기관의 진입 허용

- 신제품 출시 등 다양한 인증 수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정부 또는 비영리 기관 주도의 인증기관을 민간기관으로 확대하여 민간의 인증 경험 축적 및 역량 확보 등 국내 인증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전기용품 인증기관 지정 기준을 “영리법인”까지 확대,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은 민간 인증기관으로 이전, 소방용품 성능인증 및 형식인증은 복수의 인증기관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 ✓ 소방용품 성능인증 / 형식인증 (소방청)

- ▶ (현황) 소방산업기술원(1개)의 인증 독점 운영으로 인증처리 기간이 길고, 인증 취득비용이 높아 기업부담 가중
- ▶ (개선) 복수 인증기관의 도입



## ⑦ 해외인증 인정 확대

- 국가간 중복 시험인증 해소를 위한 정부간 협약(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추진 및 민간분야 MOU\*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 산업부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49개국, 89개 인증, 186개 품목 체결('23. 12월 기준)
- 상대국의 특정 인증기관을 자국의 법령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운영함에 따라 추가 절차 없이 교역제품에 대한 통관·유통이 원활하게 될 것이다.

## (3) 관리시스템 개선

- 인증 관리기준 강화 및 인센티브 개선 등으로 불필요한 인증의 신설과 취득을 방지할 계획이다.

### ⑧ 인증 신설 절차 강화

- 인증의 총괄기관(국가기술표준원)과 소관 부처간 인증에 대한 해석상 이견 상존 및 인증 신설 절차 미흡 등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 이에 국가표준기본법에 인증(認證, certification)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신설 인증의 적절성과 인증 정의 부합성 등을 심의하도록 「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산업부 고시)」 개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아울러, 심의에 통과된 인증을 「e나라 표준인증」(standard.go.kr)에 등록하고, 등록된 인증만 마크 사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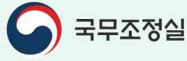
### ⑨ 공공조달의 인증 가점 정비

- 공공 조달 참여를 위해 기업들은 다양한 인증을 취득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벤처·중소기업은 인증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 불필요 인증 취득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비인증 제품과의 경쟁을 유도하도록 인증낙찰 가점을 정비할 계획이다.
- 이번 인증의 통·폐합과, 시험·검사 비용 축소 및 자기적합선언 도입 등으로 약 1,527억원의 기업부담이 경감되고, 친환경선박의 해외 수주경쟁력 제고 등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 ◆ 인증의 폐지·통합 : 연 70억원 ◆ 인증제도 개선 등 : 연 1,457억원
- 국무조정실에서는 「인증규제 정비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정부 업무 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1】 인증규제 정비방안 인포그래픽  
 【붙임2】 인증규제 정비 현황

담당 부서 <총괄>	규제혁신추진단	책임자	과 장	박경덕	(02-3778-3430)
	지원국	담당자	사무관	정의용	(02-3778-3433)
	전문위원	책임자	PM	정경택	(02-3778-3533)
		담당자	부PM	조성민	(02-3778-3475)





# 인증규제 개선방안



- 규제혁신추진단, 257개 인증 중 189개 정비 -  
- 기업 부담 연간 약 1,527억 원 경감 -

## · 인증제도 정비

### 실효성 낮은 인증 폐지 (24개)

#### ☑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

**현황** 국제적으로 '코스모스(COSMOS)인증'이 통용되나 국내 인증도 필요

**개선** 국내 인증 폐지



24년 상반기 개선 예정

### 유사·중복 인증 통합 (8개)

#### ☑ 건물에너지 관련 인증

**현황** 건물에너지 관련 인증을 2개로 운영 중

**개선** '제로에너지 빌딩 인증'으로 통합



25년 1월 시행

### 인증 비용·절차 등 개선 (66개)

####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현황** 인터넷 쇼핑몰 등 소규모 기업은 인증비용 부담

**개선** 인증 대상기업 기준 완화(매출 100억 원 이상→300억 원 이상) 및 간이심사제도 도입(심사항목·기간 축소)

24년 상반기 개선 예정



### 유사 인증 제외 (91개)

#### ☑ 수산식품 명인

**현황** 수산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우수한 자를 수산식품 명인으로 인증

**개선** 인증에서 제외, 지정제로 전환



24년 상반기 개선 예정

## · 인증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 자기적합선언 (DoC) 확대

#### ☑ 전기·생활용품 KC인증

**현황** 자기적합선언 (DoC, 사후관리 방식으로 인증)은 일부 품목만 운영

**개선** DoC 적용 대상 추가 확대



25년 하반기 개선 예정

### 민간 인증기관 진입 허용

#### ☑ 소방용품 성능인증 등

**현황** 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 독점 운영으로 인증 처리기간이 길고 취득비용이 높음

**개선** 복수의 인증기관 도입



24년 하반기 개선 예정

### 해외인증 인정 확대

#### ☑ 상호인정협정 (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현황** 45개국 71개 인증(141개 품목)

**개선** 교역제품에 대한 통관·유통이 원활하도록 49개국, 89개 인증, 186개 품목으로 확대



24년 하반기 개선 예정

## · 관리 시스템 개선

### 인증 신설 절차 강화

#### ☑ 신규 인증

**현황** 2010년 대비 인증 수 증가 (157개→257개)

**개선** 국가표준기본법에 '인증'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신설 인증의 적절성 심의 등을 위해 '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 개정



25년 상반기 개선 예정

### 공공조달의 인증 가점 정비

#### ☑ 공공조달

**현황** 기업이 공공조달 참여 시, 낙찰 가점 등을 얻기 위해 인증 취득

**개선** 인증 관련 낙찰 가점 정비



24년 하반기 개선 예정

**1 폐지 (24개)**

NO	소관 부처	명 칭	구분	NO	소관 부처	명 칭	구분
1	과기정통부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임의	9	문체부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평가인증	의무
2	교육부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	임의	10	문체부	한국관광 품질인증	임의
3	국토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임의	11	산림청	우수 도시숲 등의 인증	임의
4	국토부	전국호환교통 카드인증	임의	12	산업부	지능형전력망 인증제도	임의
5	국토부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제도	임의	13	식약처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	임의
6	농식품부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	임의	14	식약처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	임의
7	농식품부	우수 종축업체 인증	임의	15	해수부	해양환경측정 분석능력인증	임의
8	농식품부	차 품질인증	임의	16	환경부	지질공원의 인증	임의

※ 인증제도 통합을 통한 8개 폐지

**2 통합 (8개)**

NO	소관 부처	명 칭	구분	NO	소관 부처	명 칭	구분
1	고용부	위험기계기구 안전 인증 및 안전검사	의무	5	해수부	김 및 김가공품 품질인증	임의
	고용부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 안전인증	의무		해수부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임의
2	과기정통부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임의	6	환경부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 성능인증	의무
	과기정통부	홈네트워크건물인증	임의		환경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의무
3	국토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임의	7	환경부	환경측정기기 교정용품의 검정	의무
	국토부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임의		환경부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	의무
4	기상청	기상측기의 검정	의무	8	환경부	제작자동차 인증, 검사 및 정밀검사(배출가스)	의무
	기상청	기상측기 형식승인	의무		환경부	제작차의 소음인증	의무



### 3 개선 (66개)

NO	소관 부처	명칭	구분	NO	소관 부처	명칭	구분
1	개보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SMS-P)	임의	34	산업부	KS표시인증제도	임의
2	고용부	임의안전인증(S마크인증)	임의	35	산업부	계량기 형식승인 및 검정	의무
3	과기정통부	ICT융합품질인증	임의	36	산업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임의
4	과기정통부	방송통신기자재적합성평가제도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의무	37	산업부	광업시설 성능(완성)검사	의무
5	과기정통부	삼차원프린팅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임의	38	산업부	석유제품 품질검사	의무
6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품질인증(GS)	임의	39	산업부	어린이제품안전인증	의무
7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	임의	40	산업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의무
8	과기정통부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SMS)	의무	41	산업부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GR)	임의
9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임의	42	산업부	재제조제품 품질인증(REMAN마크)	임의
10	과기정통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임의	43	산업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	의무
11	교육부	교육시설안전 인증	의무	44	소방청	소방용품 성능인증	임의
12	국토부	건설기계 부품인증	의무	45	소방청	소방용품형식승인	의무
13	국토부	녹색건축인증제도	임의	46	소방청	소방장비 인증	임의
14	국토부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	임의	47	소방청	저발화성 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의무
15	국토부	측량기기 성능검사	의무	48	식약처	식품 HACCP	의무
16	국토부	택시미터의 검정	의무	49	식약처	축산물 HACCP	의무
17	국토부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의무	50	여가부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임의
18	농식품부	가축의 검정	임의	51	해경	해양오염방지 자재 약제의 형식승인	임의
19	농식품부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임의	52	해수부	무항생제 수산물	임의
20	농식품부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임의	53	해수부	방류 종자의 인증	의무
21	농식품부	동물복지축산 농장인증	임의	54	해수부	유기 수산물	임의
22	농식품부	술 품질인증제도	임의	55	해수부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	임의
23	농식품부	유기 가공식품인증	임의	56	행안부	급경사지 재해 예방용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의무
24	농식품부	전통식품품질인증	임의	57	행안부	승강기 및 승강기 부품 안전인증	의무
25	농식품부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임의	58	행안부	승강기검사	의무
26	농식품부	토종가축의 인정	임의	59	행안부	유도선 안전검사	의무
27	문체부	무대시설안전진단	의무	60	행안부	재난안전제품 인증	임의
28	방사청	국방마크(DQ마크) 인증제도	임의	61	행안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임의
29	방사청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임의	62	환경부	가정용보일러 인증 및 검사	의무
30	산림청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	임의	63	환경부	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인증	임의
31	산림청	산림인증제도(KFCQ)	임의	64	환경부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	의무
32	산림청	산림탄소흡수량인증	임의	65	환경부	환경성적표지인증	임의
33	산림청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임의	66	환경부	환경표지 인증	임의

#### 4 제외 (91개)

NO	소관 부처	명칭	구분	NO	소관 부처	명칭	구분
1	고용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의무	47	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임의
2	고용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임의	48	복지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의무
3	고용부	사회적기업	임의	49	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임의
4	고용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의무	50	복지부	혁신형의료기기군 지정	임의
5	공정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임의	51	복지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임의
6	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CCM)	임의	52	복지부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임의
7	교육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임의	53	산림청	목재제품신기술지정	임의
8	교육부 (고용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임의	54	산림청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표시	의무
9	국토부	건축설비 신기술 인정	임의	55	산림청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임의
10	국토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의무	56	산림청	석재산업 우수사업자 인증	임의
11	국토부	교통신기술 지정제도	임의	57	산림청	전통 석재제품 인증	임의
12	국토부	비단충격음 성능 등급 인정	의무	58	산업부	녹색인증	임의
13	국토부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의무	59	산업부	신기술인증(NET마크)	임의
14	국토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	임의	60	산업부	신제품인증(NEP마크)	임의
15	국토부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임의	61	소방청	탱크안전성능검사	의무
16	국토부	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	임의	62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및 기준 규격 인정	의무
17	국토부	건축신기술 지정제도	임의	63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의무
18	국토부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임의	64	식약처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의 인증	임의
19	국토부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임의	65	여가부	가족친화인증제도	임의
20	국토부	우수물류기업 인증	임의	66	중기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확인	임의
21	국토부	우수물류 신기술	임의	67	중기부	벤처기업 확인	임의
22	국토부	장수명주택 인증	의무	68	중기부	성능인증	임의
23	국토부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인증	임의	69	특허청	지식재산 경영인증	임의
24	국토부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임의	70	해수부	갯벌생태관광 인증	임의
25	기상청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	임의	71	해수부	관상어양식 우수사업자 인증	임의
26	기상청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 검정	의무	72	해수부	수산물공식품 및 음식점 등의 원산지인증	임의
27	농식품부	가공식품 및 음식점 원산지인증	임의	73	해수부	수산물 지리적표시	임의
28	농식품부	농림식품 신기술 인증	임의	74	해수부	수산물명인	임의
29	농식품부	농산물의 지리적표시제도	임의	75	해수부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	임의
30	농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인증	임의	76	해수부	우수천일염 인증	임의
31	농식품부	식품명인	임의	77	해수부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	임의
32	농식품부	신기술농업기계지정	임의	78	해수부	해양수산신기술	임의
33	농식품부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임의	79	해수부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	임의
34	문체부	문화예술 후원매개단체의 인증	임의	80	행안부	기업재난관리자 인증	임의
35	문체부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의 인증	임의	81	행안부	방재전문인력 인증	임의
36	문체부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	임의	82	행안부	재난안전 신기술 지정제도	임의
37	문체부	우수문화상품 지정	임의	83	행안부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임의
38	문화재청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	임의	84	환경부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	임의
39	문화재청	전승공예품 인증	임의	85	환경부	소음도 검사	의무
40	보훈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	임의	86	환경부	신기술인증기술검증(NET마크)	임의
41	복지부	건강친화기업 인증	임의	87	환경부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	임의
42	복지부	고령친화 우수제품	임의	88	환경부	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대기오염등급	의무
43	복지부	신기술인증(NET마크)	임의	89	환경부	자동차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의무
44	복지부	어린이집평가인증	의무	90	환경부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임의
45	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인증	임의	91	환경부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	임의
46	복지부	유전자검사기관의 평가 및 인증	의무				

5 존속 (68개)

NO	소관 부처	명칭	구분	NO	소관 부처	명칭	구분
1	과기정통부	데이터 품질인증	임의	35	산업부	가스용품검사	의무
2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시스템평가·인증(CC 인증)	임의	36	산업부	고압가스용 제품 안전검사	의무
3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임의	37	산업부	고압가스의 품질검사	의무
4	과기정통부	정보통신망연결기 정보보호인증	임의	38	산업부	단체표준인증	임의
5	관세청	AEO인증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임의	39	산업부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의무
6	국토부	감항증명	의무	40	산업부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임의
7	국토부	건설기계 형식승인 형식신고	의무	41	산업부	석탄등 품질검사	의무
8	국토부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의무	42	산업부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의무
9	국토부	궤도시설 안전검사	의무	43	산업부	열사용기자재검사	의무
10	국토부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인증	의무	44	소방청	방염성능검사	의무
11	국토부	내압용기 장착검사	의무	45	식약처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	의무
12	국토부	대체부품의 성능·품질 인증	임의	46	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의무
13	국토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의무	47	해수부	선박안전관리체제 인증	의무
14	국토부	정비조직인증	의무	48	해수부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	의무
15	국토부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의무	49	해수부	선박의 검사	의무
16	국토부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의무	50	해수부	선박평형수 형식승인 및 검정	의무
17	국토부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의무	51	해수부	소금품질검사	의무
18	국토부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의무	52	해수부	수산물품질인증	임의
19	국토부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의무	53	해수부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제도	임의
20	국토부	항공기 형식증명	의무	54	해수부	유기 가공식품	임의
21	국토부 / 복지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제도	임의	55	해수부	컨테이너 형식승인·검정	의무
22	농식품부	농산물/농산가공품의 품위성분 및 유해물질 등 검정	임의	56	해수부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검사	의무
23	농식품부	농업기계 검정	의무	57	해수부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의무
24	농식품부	무병화인증	임의	58	해수부	항만시설장비의 검사	의무
25	농식품부	인삼류 검사	의무	59	해수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	의무
26	문체부	유기시설 및 기구의 안전성 검사	의무	60	해수부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	의무
27	문체부	카지노 기구 검사	의무	61	해수부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	의무
28	문체부	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	의무	62	행안부	민방위 경보단발장비 인증	임의
29	문화재청	전통재료 인증	임의	63	환경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의무
30	방사청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의무	64	환경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임의
31	방사청	군용항공기 형식인증	의무	65	환경부	위생안전기준인증	의무
32	복지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평가 및 인증	의무	66	환경부	자동차 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의무
33	복지부	전자무기록시스템 인증	임의	67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인증	의무
34	산림청	특별관리 임산물 품질검사	의무	68	환경부	정수기 품질검사	의무